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미·중 패권 경쟁: 가치공유냐? 이익공유냐?*

이상환**

| 목 차 |

I. 서론: 포스트 코로나19(COVID-19) 시대와 국제관계의 변화	IV. 이익공유(interest sharing)와 미·중 패권 경쟁
II. 미·중 패권 경쟁과 가치·이익 논쟁	V. 결론: 향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III. 가치공유(value sharing)와 미·중 패권 경쟁	

| 논문요약 |

탈세계화·디지털화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새로운 이념 갈등을 야기하고 새로운 진영 논리로 국가들을 이합집산하게 하며 결국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조성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관계는 ‘진영 내 결속(네트워크화)’과 ‘진영 간 대결(경쟁·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국제질서는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군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군 간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태리, 호주, 한국 9개국으로 확정할 수 있고, 중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3개국에 한정할 수 있다. 가치공유에 기초한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우세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속력은 구 냉전기에 비해 약화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익공유 측면에 의하면, 군사패권은 미국 진영이 중국 진영에 비해 앞서 있으나 핵대결 구도에서 양 진영 간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통상패권은 중국, 금융·통화 패권은 미국, 이를 모두 고려한 경제패권은 아직은 미국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익공유’에 기초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

* 본 연구논문은 202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과제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어렵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 네트워크 대 중국 중심 네트워크의 대결 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측면에서 양 진영의 역량과 결속을 고려하면 미국연대가 중국연대에 비해 앞서 있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어느 한 진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공유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 진영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주제어: 코로나19, 패권, 가치공유, 이익공유, G20

I. 서론: 포스트 코로나19(COVID-19) 시대와 국제관계의 변화

1990년대 이래 세계화·탈냉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2020년대에 국제사회는 탈세계화·신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화가 가치의 ‘보편화’를 추구한다면, 탈세계화¹⁾는 가치의 ‘진영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대에 반세계주

1) KOF 세계화지수에 의하면 세계화 수준은 199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급속히 증가했고, 2008년 경제 대불황 이래 처음으로 2015년에 세계화 수준이 감소했음. 이는 세계화 측면 중 경제적 세계화에 있어서의 쇠퇴에 기인한 것이었음. 당해연도에 정치적 세계화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사회적 세계화는 정체상태였음. 2015년 이후 2021년까지는 세계화 흐름이 상승하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체상태임.

<표> 세계화 시대의 세계화지수(kof GI: 연도별세계평균치)

1990	43.6	2001	53.3	2012	60.9
1991	43.7	2002	53.4	2013	61.2
1992	44.7	2003	54.4	2014	61.8
1993	45.8	2004	55.5	2015	61.7
1994	46.8	2005	56.4	2016	61.9
1995	48.1	2006	57.5	2017	62.1
1996	48.3	2007	58.8	2018	61.2
1997	49.3	2008	59.3	2019	62.0
1998	50.3	2009	59.6	2020	61.8

의(anti-globalism)가 부상했고 세계화에 소외된 국가들과 세계화가 초래한 국내외적 부정적인 결과들, 즉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경험한 세력들이 세계화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역사상 탈세계화 현상이 부각된 시기는 세계화 규범에 충실한 시대인 1850-1914년 기간과 1990-2010년 기간 이후 대공황을 겪은 1930년대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침체기인 2010년대이다. 하지만 1930년대와 2010년대의 탈세계화 양상은 성격상 차이가 있다. 1930년대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를 지키려 했고, 자급자족에 의존하려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들이 탈세계화 현상을 주도했다. 반면 2010년 이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그 경제적 동인은 보호무역주의와 경기침체이고, 정치적 동인은 상이한 가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이래 국제사회는 COVID-19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피해를 경험했다. 이는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에 따른 갈등을 유발했다. 세계화는 국가 간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를 야기하고, 탈세계화는 이에 대한 반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은 유럽 국가들 내에서 반이민 정서, 이슬람 혐오증, 난민 문제의 안보화 경향 등을 증폭시켜왔다. 이 또한 탈세계화 현상을 초래해왔다. 열린 사회 유럽이 난민 문제와 코로나19로 내부 갈등을 경험하면서 닫힌 사회로 이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요약하건대, 탈세계화(degloabalization)는 국가 간 상호의존과 통합이 약화하는 과정을 일컫으며 국가 간 경제 관계에서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고 국가 간 정치 관계에서 통합에 역행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화의 반대개념이다. 이는 COVID-19, 난민 문제, 미-중 패권 경쟁 등이 그 주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COVID-19는 2020년 이래 인적·물적 자원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난민 문제는 유럽 내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유럽 국가

1999	51.3	2010	60.1	2021	61.5
2000	52.5	2011	60.5		

· 스위스 쥐리히 연방공대의 기업 연구소 KOF (Konjunkturforschungsstelle der Eidgenössischen Technischen Hochschule Zürich/Swiss-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세계화지수

로 하여금 국경 장벽을 높이게 하고 있다. 나아가 미-중 패권 경쟁은 국가들을 진영 논리 속에서 진영 간 대결 구도를 초래하고 있다(이상환 2020a; 이상환 2020b; 이상환 2020c).

한편 디지털화(digitalization/digitization)는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기술의 채택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과학기술혁명(AI, Big Data, Robot 등)이 그 주요한 동인이다. 여기서 인공 지능(AI)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컴퓨터를 일컬으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초 지능을 말한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모든 데이터를 지칭하며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오늘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만을 골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로봇은 어떠한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로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 등으로 나뉜다. 로봇은 사람 대신 또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장치이다.

세계는 이미 5G,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의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해왔다. 중국도 ‘기술’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써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을 심화하며 양국 간 첨단기술의 안보화를 둘러싼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경제확산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융서비스 산업의 핀테크화와 디지털 화폐주도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과정은 기술패권 경쟁과 정확히 그 맥락을 같이하며,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EU 등)은 4차 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 및 제도(인프라)를 마련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여 미국과 중국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탈동조화’와 함께 ‘탈세계화’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 경쟁과 표준경쟁이 뒤섞인 가운데, 세계는 신냉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치구현 충돌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

식은 ‘표준전쟁(standard war)’이다. 각종 표준설정에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시킨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력의 선택은 중국식 과학기술 혁명을 따르거나 아니면 가치 추구가 다른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기에는 중국이 가진 잠재력이 크고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서 쉽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상환 2020d).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제사회의 현상을 대변한다. 탈세계화·디지털화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새로운 이념 갈등을 야기하고 새로운 진영 논리로 국가들을 이합집산하게 하며 결국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조성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관계는 ‘진영 내 결속(네트워크화)’과 ‘진영 간 대결(경쟁·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II. 미·중 패권 경쟁과 가치·이익 논쟁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국제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진영 내 협력과 가치와 이익을 달리하는 진영 간 갈등이 과거 냉전의 모습이었다. 그 대결 구도에서 살아남는 길은 진영 속에서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냉전은 무엇을 일컫는가. 신냉전은 탈냉전기 패권 경쟁의 산물이고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 충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교체계가 다른 힘 있는 중국의 출현은 서구 세력의 입장에 의하면 최악의 상황이다. 당시 유럽의 영국에서 북미의 미국으로의 평화로운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가능했던 것은 양국 간 ‘가치공유(shared values)’가 그 배경이었다(Organski 1980; Lemke & Reed 1996). 만약 미국과 중국 간 가치의 공유가 미약하다면 평화로운 세력전이가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부정적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국력은 미국의 국력에 비교가 되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김태운 2009). 하지만 2020년대의 상황은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구 냉전과는 사뭇 다르다. 그 당시는 미·소 간 그리고 제1세계와 제2세계 간 ‘이익공유(shared interests)’가 미미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 즉 경쟁국가 간 이익의 공유가 적지 않다.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극단적인 선택을 억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군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군 간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가치공유 우선 국가들은 중국의 반인권적·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지만, 이익침해를 걱정하며 역학 구도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한다.

가치공유와 이익공유라는 선택에 직면하여 각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짧게 말하자면, 둘 다 중요하다. 가치공유를 우선하면서 중국을 사고가 다른 위협 세력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려는 서구강대국과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중국의 가치 추구가 어떠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편승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약소국 간 대결 구도로 국제사회는 이합집산하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구 냉전이 가치·이익 공유집단과 이(異)집단 간의 갈등이었다면, 신냉전은 가치 우선 집단과 이익 우선 집단 간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가치공유에 따른 결속력이 일부 강대국을 제외하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환 2020b; 이상환 2020c; 이상환 2020d).

신냉전 시대에 걸맞은 이념대결은 어떠한 구도인가. 경제적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자본주의(시장자유성 우선) 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관료자본주의(국가개입 우선)가 그것이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축으로 한 민주주의(다당제, 법치주의) 대 중국을 축으로 한 권위주의(일당 지배, 인치주의)를 말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냉전과 다른 양상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서구국가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AI, 빅데이터 시대에 중국의 기술혁명이 반인권적·반윤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갖게 된 것 때문이다(이상환 2022).

COVID-19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초래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인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촉진했고 새로운 가치논쟁을 유발했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가치의 진영화를 특징으로 하며 진영 내 네트워크화와 진영 간 대결로 점철된다. 미국 중심 네트워크 대 중국 중심 네트워크의 대결 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란 가치공유

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를 의미하고, 이는 이익공유를 우선하며 가치공유를 등한시하는 중국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와 상충된다. 미국연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 4국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²⁾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³⁾를 기반으로 하고, 중국연대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전략,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기초한다(이상환 2022).

III. 가치공유(value sharing)와 미·중 패권 경쟁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상황에서 진영 대결이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가치공유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세력 대결 구도를 살펴보고

- 2) 4자 안보대화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한 4개국이 국제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 회담임. 워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의 일환으로 창설됨.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함.
- 3) IPEF는 미국 주도로 출범(2022.5.23)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를 추구하는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함.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고자 함.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정책의 국제 표준을 정하고자 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경제적 연대의 성격임. 회원국은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뉴질랜드, 동남아시아 회원국들, 피지(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세력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참여시킨 14번째 회원국) 등임. 한편 대만은 IPEF 참가를 희망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거부하고 있음.
- 4) 상하이협력기구는 1996년 중국 상하이에서 모인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들이 ‘국경 지대의 군사적 신뢰 강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됨. 이는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면서 상하이 협력 기구로 개편됨. 2017년에는 인도, 파키스탄이 가입했고, 2021년에는 이란이 정식 가입 신청함. 상하이협력기구는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함. 현재 언급한 정회원국 8개국 외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 벨라루스 등이 옵서버로 활동 중이며 기타 초청 국가 및 기구가 있음.

자 한다. 이에 그 연구대상을 주요 거점 강국들의 모임인 G20⁵⁾로 한다. G20가 형성되기 전에는 G7이 매년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21세기 들어 선진 7개국만의 협력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과 탈냉전기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공업국들이 포함되지 않아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 G20이다.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全) 세계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90%에 이르며, 전 세계 교역량의 80%가 G20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G20 국가들(EU의장국을 제외한 19개국)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2021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의 자유도(Freedom Ratings)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미·중 패권 경쟁상황에서 미국이 진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인권·민주화 및 국가투명성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그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이를 지향하고 있다면 수용 가능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힘을 키우는 국가는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G20 국가의 인권·민주화 수준을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연간 보고서 “세계 자유 현황(Freedom in the World)”을 발간해 왔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각국 및 지역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다. 프리덤 하우스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그룹들 가운데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자(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임명된 개인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유의 개념은 “시민들이 정부나 다른 어떤 지배 세력들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

5)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됨.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EU의장국에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5개국,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 그리고 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는 20개국임. EU의장국이 G7에 속할 경우에는 19개국이 됨.

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⁶⁾

<표 1> G2와 G20 국가의 자유도(Freedom Ratings)⁷⁾

세계지역	국가명	프리덤하우스(FH)의 자유도(FR) (2021년 기준)			
		Global Freedom Scores		Internet Freedom Scores	
		Political Rights + Civil Liberties	Status	Obstacles to Access + Limits on Content + Violations of User Rights	Status
서구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7개국)	호주	95(39+56)	Free	75(23+27+25)	Free
	캐나다	98(40+58)	Free	87(23+32+32)	Free
	독일	94(39+55)	Free	79(22+29+28)	Free
	영국	93(39+54)	Free	78(23+30+25)	Free
	미국	83(32+51)	Free	75(21+29+25)	Free
	프랑스	89(38+51)	Free	78(23+30+25)	Free
	이태리	90(36+54)	Free	76(21+30+25)	Free
아시아 (7개국)	일본	96(40+56)	Free	76(21+29+26)	Free
	한국	83(33+50)	Free	67(22+24+21)	Partly Free
	인도	66(33+33)	Partly Free	49(11+21+17)	Partly Free
	인도네시아	59(30+29)	Partly Free	48(14+17+17)	Partly Free
	튀르키예	32(16+16)	Not Free	34(15+10+9)	Not Free
	중국	9(-2+11)	Not Free	10(8+2+0)	Not Free
라틴 아메리카 (3개국)	사우디아라비아	7(1+6)	Not Free	24(12+8+4)	Not Free
	브라질	73(31+42)	Free	64(20+24+20)	Partly Free
	아르헨티나	84(35+40)	Free	71(19+27+25)	Free
동구유럽/ 중앙아시아 (1개국)	멕시코	60(27+33)	Partly Free	60(18+25+17)	Partly Free
	러시아	19(5+14)	Not Free	30(12+10+8)	Not Free
아프리카 (1개국)	남아공	79(33+46)	Free	73(17+29+27)	Free

▪ 글로벌 자유지수(Global Freedom Scores: GFS)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로 평가되며, 인터넷 자유지수(Internet Freedom Scores: IFS)는 접근장애(Obstacles to Access)와 콘텐츠제한(Limits on Content) 및 사용자권리위반(Violations of User Rights)으로 평가됨.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자유가 잘 보장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것임

6)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2022년 7월 22일 검색)

7)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2022년 7월 22일 검색)

글로벌 자유지수(Global Freedom Scores)에 의하면, 자유국은 12개국으로 G7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와 MIKTA 국가 중 한국과 호주 2개국, BRICS 국가 중 브라질과 남아공 2개국,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에 해당한다. 비자유국은 BRICS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 2개국, MIKTA 국가 중 터키(튀르키예) 1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총 4개국이다. 또한 부분적 자유국은 MIKTA 국가 중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2개국과 BRICS 국가 중 인도를 포함하는 총 3개국이다. 프리덤하우스의 글로벌 자유도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정치적 권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투표할 권리와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시민적 자유’는 “국가의 방해 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제도에 참여하며 개인적인 자율권을 지닐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치적 권리(40점)와 시민적 자유(60점)의 점검 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합산을 통하여 0에서 100까지의 등간척도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상태이다.⁸⁾

인터넷 자유지수(Internet Freedom Scores)에 의하면, 자유국은 10개국으로 G7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와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자유지수와 마찬가지로 비자유국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다. 또한 부분적 자유국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외에 한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5개국이다. 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는 ‘접근 장애(Obstacles to Access)’와 ‘콘텐츠 제한(Limits on Content)’ 및 ‘사용자 권리위반(Violations of User Rights)’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접근 장애(25점)와 콘텐츠 제한(35점) 및 사용자 권리위반(40점)의 점검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합산을 통한 0에서 100까지의 등간척도로 100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상태이다.⁹⁾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글로벌 자유지수+인터넷 자유지수)에 기초하여 ‘가치공유 국가군’을 구분하면, Group 1(자유국가군)은 G7 국가와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 10개국이다. Group 2(비자유국가군)는 중국, 러시아, 튀르

8)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2022년 7월 22일 검색)

9)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2022년 7월 22일 검색)

키예,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다. Group 3(부분자유국가군)은 자유국에 근접한 한국,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이에 해당한다. 미·중 패권 경쟁상황에서 자유도에 근거한 미국 중심의 진영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태리,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 한국, 브라질 등 12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 중심의 진영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나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3개국은 양 진영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가치공유 측면에서 보면 미국 진영 세력이 중국 진영 세력에 비해 앞서 있음을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구 냉전기 미·소 간 대결 구도를 연상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G20 국가의 국가투명성을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를 활용한다. 1993년에 설립되어 현재 100여 개국에 지부가 있는 국제 반부패 NGO의 대표적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TI는 부정부패 퇴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고 또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TI는 국제사무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사무국은 각 지부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지부 간 연계를 도와준다. 또한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orld Bank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TI는 OECD 뇌물거래방지협정의 발효와 함께 국제적인 반부패연대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부패 퇴치를 위한 국제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TI는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는 국가별 CPI를 1995년부터 매년 독일 괴팅겐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해 왔다.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TI의 2021년 부패지수는 주로 기업인과 정치분석가의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부패의 정도가 심할수록 즉 투명성이 낮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 반면, 부패의 정도가 약할수록 즉 투명성이 높을수록, 즉 높은 점수, 즉 100점에 근접하게 된다. 부패지수는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지수이며 대상 국가의 일반적인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부패지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부패의 규모 및 강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¹⁰⁾

<표 2> G2와 G20 국가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¹¹⁾

세계지역	국가명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CPI)(2021년 기준)	
		순위(180개국 중)	부패지수
		G20 평균 = 54.11	
서구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7개국)	호주	18	73
	캐나다	13	74
	독일	10	80
	영국	11	78
	미국	27	67
	프랑스	22	71
	이태리	42	56
아시아 (7개국)	일본	18	73
	한국	32	62
	튀르키예	96	38
	사우디아라비아	52	53
	중국	66	45
	인도	85	40
	인도네시아	96	38
라틴아메리카 (3개국)	브라질	96	38
	멕시코	124	31
	아르헨티나	96	38
동구유럽/ 중앙아시아 (1개국)	러시아	136	29
아프리카 (1개국)	남아공	70	44

• 부패인지지수(CPI)가 100이면 가장 청렴한 것을, 0이면 가장 부패한 것을 나타냄

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2022년 7월 29일 검색)

11)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2022년 7월 29일 검색)

TI의 부패인지수에 따르면, 서구유럽/북미/오세아니아 지역의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미국, 이태리 순으로 투명하고, 아시아 지역은 일본과 한국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적으로 투명한 국가에 해당한다. CPI가 50 이하인 경우 중국(45), 남아공, 인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러시아(29) 순으로 보다 부패한 국가가 된다.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와 유사하게 미국진영 세력은 G7 국가와 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할 수 있고, 중국진영 세력은 BRICS 5개국과 MIKTA 중 3개국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9개국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투명성 수준이 낮더라도 민주적 정권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진영 구분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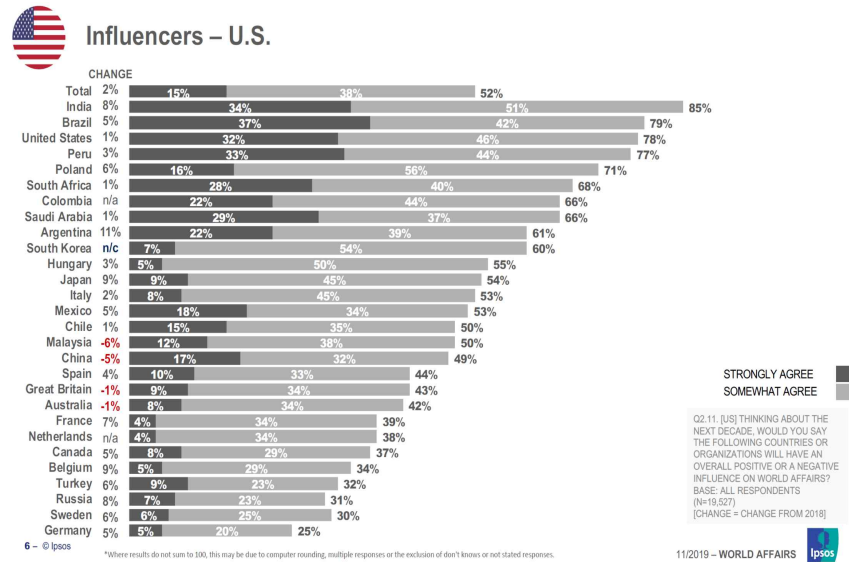
프리덤하우스와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에 근거하여 요약하면, 미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태리, 호주, 한국 9개국으로 확정할 수 있고, 중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3개국에 한정할 수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7개국은 진영 간 가치공유 대결 구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공유에 기초한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우세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속력은 구 냉전기에 비해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동맹 관련 설문조사¹²⁾ 결과를 담은 입소스(Ipsos)의 세계문제(World Affairs)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위 5개 국가는 인도(85%), 브라질(79%), 미국(78%), 페루(77%), 폴란드(71%)이고, 중국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위 5개 국가는 멕시코(82%), 러시아(82%), 페루(81%), 사우디아라비아(78%), 브라질(76%)이다. 신흥시장의 사람들이 미국보다 중국이 향후 글로벌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 점은 흥미롭다. “세

12) 세계 3위의 시장조사업체로 90개 시장에 진출하여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97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Ipsos의 설문조사 결과(‘세계질서의 미래’ 보고서)로 COVID-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조사된 것임. 설문조사는 Ipsos Online Panel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28개국에서 매일 실시됨. 여기에 보고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프랑스, 영국, 독일,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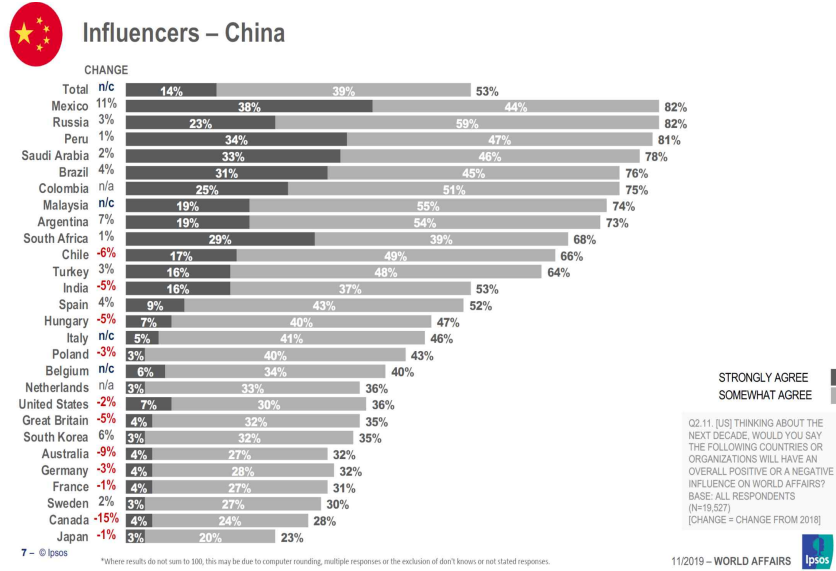
계절서의 미래: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52%는 미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53%는 중국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말한다. 또한 미국 혹은 중국의 경제 및 정치 모델을 따라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세계가 초강대국의 역할에 대해 인식이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 많은 리더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4명 이상(81%)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는 상위 3개국인 멕시코(93%), 중국(92%), 영국(91%)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이들 중 중국과 멕시코는 미국과 통상협상을 하고 있고 영국은 유럽 연합(EU)을 탈퇴했다.¹³⁾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조사¹⁴⁾



13) Ipsos, <http://www.ipsos.com>. (2022년 7월 29일 검색)

14) Ipsos, <http://www.ipsos.com>. (2022년 7월 29일 검색)



<그림 1>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주요 국가 국민의 인식에 관한 막대그래프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G20 국가를 나열하면, 인도(85%), 브라질(79%), 남아공(68%), 사우디아라비아(66%), 아르헨티나(61%), 한국(60%), 일본(54%), 이태리(53%), 멕시코(53%), 중국(49%), 영국(43%), 호주(42%), 프랑스(39%), 캐나다(37%), 튀르키예(32%), 러시아(31%), 독일(25%) 순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G20 국가를 나열하면, 멕시코(82%), 러시아(82%), 사우디아라비아(78%), 브라질(76%), 아르헨티나(73%), 남아공(68%), 튀르키예(64%), 인도(53%), 이태리(46%), 미국(36%), 영국(35%), 한국(35%), 호주(32%), 독일(32%), 프랑스(31%), 캐나다(28%), 일본(23%) 순이다. G7 국가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각각 영국(43%>35%), 독일(25%<32%), 프랑스(39%>31%), 이태리(53%>46%), 캐나다(37%>28%), 일본(54%>23%)로 독일을 예외로 하고 대부분(+인도, 브라질, 호주, 한국)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이 G7 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사대상 G20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튀르키예, 러시아, 독

일 6개국 국민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미국과 비교하여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식조사 결과는 미국과 중국 간(49%↔36%) 상호 부정적 인식이 지배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일부 예외(독일)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 언급한 가치공유에 근거한 진영 논리가 작동함을 알 수 있다.

IV. 이익공유(interest sharing)와 미·중 패권 경쟁

진영 논리에 기초하여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을 안보 및 경제 이익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가가 미국 및 중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우호국(like-minded country)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경제 영역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었고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이해관계의 조정이 복잡한 상황이다.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의 연계로 동맹 지형을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안보 이익을 위해 경제이익을 희생하거나 경제이익을 위해 안보이익을 희생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결국 총체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G20 국가 간 ‘이익공유’를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의 관점에서 양 진영 간 경쟁구도를 각국의 역량(군사력 및 경제력)과 국제레짐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진영의 안보 네트워크화는 유럽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의 쿼드(QUAD)로 대변된다. 유럽에서 구소련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 형성된 나토가 구냉전기 집단방위기구에서 탈냉전기 집단안보기구로 성격 변화를 거쳤다면, 쿼드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대화를 일컫는다. 올해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 30개국 외에 아시아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국으로 참석하여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쿼드의 연결은 러시아와

중국을 안보적으로 견제하는 안보 동맹이 구축됨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은 알바니아(2009), 벨기에(1949), 불가리아(2004), 캐나다(1949), 크로아티아(2009), 체코(1999), 덴마크(1949), 에스토니아(2004), 프랑스(1949), 독일(1955), 그리스(1952), 헝가리(1999), 아이슬란드(1949), 이태리(1949), 라트비아(2004), 리투아니아(2004), 룩셈부르크(1949), 몬테네그로(2017), 네덜란드(1949), 북마케도니아(2020), 노르웨이(1949), 폴란드(1999), 포르투갈(1949), 루마니아(2004), 슬로바키아(2004), 슬로베니아(2004), 스페인(1982), 튀르키예(1952), 영국(1949), 미국(1949) 총 30개국이다. 이들 중 G20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튀르키예, 영국, 미국 7개국이고, EU 회원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22개국이다. 나토회원국이나 EU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알바니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터키, 영국, 미국 9개국이고, EU회원국이나 나토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몰타 6개국이다.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나토 동맹국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4개국 안보대화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참여국으로 한다. NATO 30개국과 QUAD 4개국 및 ANZUS 3개국을 포함한 34개국에다가 한국과 필리핀을 합하면 36개국이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안보 동맹은 정치적 민주주의 국가 동맹인 D-10(G7과 한국, 인도, 호주)과 정보동맹인 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확대한 Five Eyes+(9 Eyes, 14 Eyes, 한국 포함) 논의와 연계된다. 위에 언급한 쿼드를 확대한 QUAD+에도 한국을 포함할 것이 논의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진영의 안보동맹에 편입됨을 공고히 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복원과 나토와의 공조 합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한편 중국의 경우 공식 군사동맹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안보 네트워크의 기본축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들 수 있다. SCO의 회원국은 인도, 카자흐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총 8개국이며, 옵서버 국가로서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화 파트너 국가로서 6개국이 참가하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튀르키예, 스리랑카 등이다. 중국 안보 네트워크의 국가들 중 인도는 QUAD의 회원이기도 하고 튀르키예는 NATO의 회원국이기도 한 중첩된 네트워크 속에 놓여 있다. 중국의 군사동맹 연대는 SCO 관련 16개국(인도와 튀르키예 제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G20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에 불과하다. 이를 G20 국가 중 미국의 군사동맹 연대 11개국(G7, 한국, 호주, 인도, 튀르키예)과 비교하면 열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군사동맹의 군사력과 중국 군사동맹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GFP(Global Fire Power)가 2022년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핵무기 제외) 국가 순위(Military Strength Ranking)에 의하면, 1위 미국(.0453), 2위 러시아(.0501), 3위 중국(.0511), 4위 인도(.0979), 5위 일본(.1195), 6위 한국(.1261), 7위 프랑스(.1283), 8위 영국(.1382), 9위 파키스탄(.1572), 10위 브라질(.1695), 11위 이태리(.1801), 12위 이집트(.1869), 13위 튀르키예(.1961), 14위 이란(.2104), 15위 인도네시아(.2251), 16위 독일(.2322), 17위 호주(.2377), 18위 이스라엘(.2621), 19위 스페인(.2901), 20위 사우디아라비아(.2966) 등이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의 군사동맹국은 1위 미국,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영국, 11위 이태리, 13위 튀르키예, 16위 독일, 17위 호주, 18위 이스라엘, 19위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의 군사동맹국은 2위 러시아, 3위 중국, 9위 파키스탄, 14위 이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 진영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미국 군사동맹의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GFP 2022).

이 군사력 지수는 50여 개의 개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된 것으로 0.0에 가까울수록 일국의 군사력이 강한 것이다. 핵무기 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재래식 전쟁 능력만 산정한 것으로 위 국가 중 핵보유국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2020년 1월 기준 1위 미국(5,800), 2위 러시아(6,375), 3위 중국(320), 4위 인도(150), 7위 프랑스(290), 8위 영국(215), 9위 파키스탄(160), 18위 이스라엘(90) 8개국(북한 20-60을 포함하면 9개국)이다. 구 냉전기인 냉전 1기의 공산진영 패권국인 소련과 신 냉전기인 현 냉전 2기에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군사패권은 미-러-중 3각 경쟁구도이나 군사비 지출규모를 보면

2019년 기준 미국이 7,3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이는 군사비 지출규모 2위인 중국(2,076억 달러)을 비롯한 11위 브라질까지의 군사비를 합산한 7,260억 달러를 상회한다.¹⁵⁾ 핵전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하는 세계 6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미-러, 미-중 세계패권 경쟁과 함께 동아시아에서는 중-일, 남아시아에서는 중-인 지역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남북한 대결구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형국이다. 군사력 측면에 한정하여 판단하면 미국이 패권에 가까운 지위(near-hegemony)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cKeown 1983). 하지만 이들 국가가 모두 핵보유국이다 보니 핵억지 전력을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는 구조이다. 올해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최근 미국 진영의 경제 네트워크화는 강화되고 있다. 2020년대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미국의 대 한국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한편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요구와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및 일부 첨단산업에서의 중국 배제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발발과 기후위기를 계기로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품목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자각한 미국은 최근 탈중국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의 첨단기술탈취, 불공정경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고, 이는 초당적 지지를 얻어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로의 복귀와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공급망 재편을 위한 우방과의 공조 협력에도 속도가 불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공급망 강화 4대 핵심 품목 중 희토류를 제외한 3개 품목에서 협력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은 미국의 긴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이상환 2021a; 이상환 2021b).

미국 진영의 경제 네트워크는 유럽에서의 EU(27개국)와 아시아 및 오세

15)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 (2022년 7월 8일 검색)

아니아에서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들 수 있다. IPEF의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칩4 혹은 Fab4도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이고, 배터리 동맹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경제네트워크화 노력의 일환이다.

반면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하여 경제력 영향력을 제고하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처음으로 주도해 만든 국제금융기구로 ‘중국판 세계은행(WB)’을 꿈꾸며 개발도상국의 기초시설(인프라)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설립을 처음 제안한 뒤 미국의 견제에도 57개 회원국으로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현재 AIIB에 가입한 나라는 103개국으로 경쟁 상대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68개국) 수를 능가한다. 문제는 회원국 수는 ADB를 앞질렀지만, 기금과 대출 규모로 비교하면 ADB에 못 미친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AIIB의 전체 기금 규모는 307억 8000만 달러다. ADB(2500억 달러)의 8분의 1, 세계은행(6000억 달러)의 2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개도국은 AIIB와 중국 국유은행 등에서 빌린 자금으로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나섰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시설의 이용권을 중국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빠져서 신제국주의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표 3>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위상¹⁶⁾

항목		미국	중국	G2
세계 GDP	비중(%)	24.2	15.8	40
	달러(\$)	20조 4,941억	13조 4,074억	33조 9,015억
세계 무역	비중(%)	10.9	11.8	22.6
	달러(\$)	4조 2,784억	4조 6,230억	8조 9,014억

1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2022년 7월 15일 검색);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2022년 7월 8일 검색)

한편 중국 주도의 통상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¹⁷⁾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회원국으로 역내 통상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RCEP은 일본·호주 주도의 통상블록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과 경쟁관계로 양 통상블록은 중첩된 회원국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7개국이 있다.

경제력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GDP에서 비견할 국가가 없는 최대 강국이고 중국은 세계 GDP에서 2위를 차지하는 강국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2분의 1 정도로 열세에 놓여 있다. 경제적 차원의 경성국력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을 평가하면 아직 초강대국인 미국과 거리감이 있으나 최근 일본, 독일을 따라잡은 것을 보면 그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명목 GDP 기준)은 1위 미국(20조 9,330억 달러), 2위 중국(14조 7,230억 달러), 3위 일본(5조 490억 달러), 4위 독일(3조 8,030억 달러), 5위 영국(2조 7,110억 달러), 6위 인도(2조 7,090억 달러), 7위 프랑스(2조 5,990억 달러), 8위 이탈리아(1조 8,850억 달러), 9위 캐나다(1조 6,430억 달러), 10위 한국(1조 6,310억 달러) 순이다.¹⁸⁾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무역규모에 따른 세계

17) RCEP과 CPTPP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RCEP	CPTPP
공식협상 개시	2013년 5월	2010년 3월
협상 타결	2020년 11월 (2022년 1월 발효)	2018년 3월 (2018년 12월 발효)
세계 GDP / 교역 비중	29% / 25%	13% / 14%
협상 범위	관세 철폐 치중	관세 + 비관세장벽 철폐
자유화 수준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상품 분야 최대 92% 관세 철폐)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상품 분야 95-100% 관세 철폐)
회원국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10)	11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공통 회원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1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2022년 7월 15일 검색)

순위는 1위 중국(3조 8,278억 달러), 2위 미국(3조 162억 달러), 3위 독일(1조 9,920억 달러), 4위 네덜란드(1조 61억 달러), 5위 일본(9,861억 달러), 6위 홍콩(8,742억 달러), 7위 프랑스(8,379억 달러), 8위 한국(8,026억 달러)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통화별 SDR 바스켓 비중은 2016년 위안화가 편입된 이후 1위 달러화 41.73%, 2위 유로화 30.93%, 3위 위안화 10.92%, 4위 엔화 8.33%, 5위 파운드화 8.09%이고, 각국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비중은 1위 미국 달러화 63.96%, 2위 유로화 19.7%, 3위 영국 파운드화 4.42%, 4위 일본 엔화 4.21%, 5위 캐나다 달러화 2.04%, 6위 호주 달러화 1.85%, 7위 중국 위안화 1.07%이다. 주요 통화별 외환상품시장 거래비중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순이다.¹⁹⁾ 요약하건대, 통상패권은 중국, 통화패권은 미국, 그리고 이를 모두 고려한 경제패권은 아직은 미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보다 대칭적인 역학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별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보면, 1위 중국 3,470억 달러, 2위 일본 689억 달러, 3위 독일 649억 달러, 4위 멕시코 632억 달러, 5위 아일랜드 359억 달러, 6위 베트남 320억 달러, 7위 이태리 285억 달러, 8위 한국 277억 달러, 9위 248억 달러, 10위 인도 244억 달러 등이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미국과의 교역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국가는 중국 진영의 중국, 베트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주요 교역 관계(주요 국가별 수출입 비율)를 보면, 대 일본 수출은 6.4%, 수입은 8.3%이고, 대 미국 수출은 17%, 수입은 8.2%이며, 대 EU 수출은 15.9%, 수입은 12.4%를 차지한다. 대 한국 수출입의 경우도 각각 4.3%, 9.7%이다.²⁰⁾ 중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미국 진영의 국가들로 내용을 떠나서 외형적인 교역 규모로 보면 중국이 진영논리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한 서구진영의 피해도 적지 않으리라

19)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2022년 7월 8일 검색);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2022년 7월 15일 검색);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2022년 7월 8일 검색)

20)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2022년 7월 8일 검색);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2022년 7월 8일)

예상된다.

G20 국가를 수출입 의존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의존도는 독일 39.4%, 한국 37.5%, 멕시코 35.6%, ... 중국 18.6%, 일본 14.3%, 미국 8.0% 순이다. 수입의존도는 멕시코 36.6%, 독일, 31.7%, 한국 31.3%, ... 중국 15.1%, 일본 13.8%, 미국 12.4% 순이다.²¹⁾ 중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수출입이 국가 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무역의존도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110.30으로 대외무역 없이 경제운용이 불가능한 국가이고, 독일 95.19, 영국 66.49, 프랑스 56.68, 중국 50.10, 미국 31.55, 일본 31.35 순으로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기 다르다. 미·중 간을 비교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불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은 2위(1,352억 달러), 중국은 1위(2,434억 달러)의 교역국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은 세계 6위, 중국의 경우 한국은 세계 3위의 교역국이다.

IMF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G20 국가 중 선진국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9개국이고, 개도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10개국이다. 미·중 경제패권 경쟁 상황에서 G20 국가 중 선진국은 모두 미국 진영의 국가이고, 중국 진영의 국가는 개도국뿐이다.²²⁾ 위의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양 진영 간 상호의존의 심화로 진영 간 대결로 인한 양 진영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리라 본다.²³⁾ 하지만 경쟁 구도하에서 상대적 피해의 정도는 역학 구도상 미국보다 중국에게 크리라 예상된다. 통상패권은 중국, 금융·통화 패권은 미국, 이를 모두 고려한 경제패권은 아직은 미국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군사패권은 미국 진영이 중국 진영에 비해 앞서 있으나 핵대결

21)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2022년 7월 8일 검색);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2022년 7월 8일 검색)

2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2022년 7월 15일 검색)

23) 안보-통상 연계이론(Pollins 1989)은 냉전적 양극체제 하의 (안보)동맹 내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은 보다 가능하며 탈냉전적 다극체제 하의 이질적인 동맹 사이에서 보호무역이 있음 직하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안보적 상호의존도의 견지에서 국제통상관계를 분석함. 이는 진영 간 및 국가 간 쌍무적인 정치군사적 협력과 갈등이 양자 간 통상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함. 동맹국에 대해서 일국은 자유무역정책을 구현하기 쉬우며 보다 협력적인 통상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큼. 안보적인 고려가 통상관계에 작용한다고 함.

구도에서 양 진영 간 공포의 균형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익 공유’에 기초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 속도는 무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V. 결론: 향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오늘날 세계질서하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하에서 중·일 패권 경쟁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발생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질서 속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질서 속에서 동시에 현상타파 세력으로서의 자세를 취할 경우 미국이 어떠한 외교적 자세를 취하느냐가 향후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현재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미국의 현상타파적 태도, 즉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의 변화 움직임 또한 그 불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이상환 2015; 이상환 2017; 이상환 2022; 김기수 2009; 김상준 2013; 박홍서 2008).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편승(bandwagoning), 균형(balancing), 헤징(hedging) 등이 있다. 편승 전략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는 고민이 있게 되고 이는 위에 언급한 가치공유를 우선하느냐 아니면 향후 (경제적) 이익공유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균형 전략의 경우 우리의 역량이 양국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헤징 전략은 약소국 전략이자 방관적 수세전략으로서 위험분산을 통해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일견 가장 현명해 보이나 결국 우리의 역량에 따라 그 성공 가능성이 달라진다(강택구 2008; 김우상 2000; 김태운 2009). 하지만 편승, 균형, 헤징 모두 행위자 중심의 외교전략에 해당한다. 중견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외교적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식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중 패권 경쟁 상황하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는 선택 상황을 스스로 야기하고 선택을 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보복을 초래하기 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은 행위규범(원칙) 중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외교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외교노선을 대외에 천명하여 지켜나감으로써 한국의 외교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전략인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 상황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때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둘 다든 우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장에 대해 지지할 수 있는 행위규범 중심의 외교가 중요하다(이상환 2015; 이상환 2017; 이상환 2022).

COVID-19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초래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인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촉진했고 새로운 가치논쟁(인권·민주화, 국가투명성 등)을 유발했다. 탈세계화·디지털화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새로운 이념 갈등을 야기하고 새로운 진영 논리로 국가들을 이합집산하게 하며 결국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조성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관계는 ‘진영 내 결속(네트워크화)’과 ‘진영 간 대결(경쟁·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연대는 기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4국 안보대화(QUAD),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기반으로 하고, 중국연대는 일대일로(BRI) 전략,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기초한다.

미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한국 9개국으로 확정할 수 있고, 중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3개국에 한정할 수 있다. 가치공유에 기초한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우세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속력은 구 냉전기에 비해 약화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익공유 측면에 의하면, 군사패권은 미국 진영이 중국 진영에 비해 앞서 있으나 핵대결 구도에서 양 진영 간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통상패권은 중국, 금융·통화 패권은 미국, 이를 모두 고려한 경제패권은 아직은 미국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익공유’에 기초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한편 양 국간 및 양 진영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그들 간 관계를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는 제어장치가 되리라 본다. 가치공유냐 이익공유냐의 기로에서 단기적인 이익공유 우선의 외교

노선보다는 중장기적인 가치공유 우선의 외교 노선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가치의 진영화를 특징으로 하며 진영 내 네트워크화와 진영 간 대결로 점철된다. 미국 중심 네트워크 대 중국 중심 네트워크의 대결 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는 가치공유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를 의미하고, 중국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는 이익공유를 우선하며 가치공유를 등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측면에서 양 진영의 역량과 결속을 고려하면 미국연대가 중국연대에 비해 앞서 있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어느 한 진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공유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 진영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택구 (2008). “동아시아 지역 내 강대국간 경쟁과 세력전이: 21세기 중국의 대일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8집. 2호, pp. 7-31.
- 김기수 (2009). “미·중 경제,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 미국은 중국의 자본에... 중국은 미국의 시장에.” 『Chindia Journal』. 제29호, pp. 31-33.
- 김상준 (2013). “지역과 헤게모니: 미국 헤게모니의 쇠락과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1호, pp. 119-150.
- 김우상 (2000). “미·중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pp. 7-26.
- 김태운 (2009). “미·중 간 세력전이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협력질서.” 『아시아연구』. 제12집. 1호, pp. 33-53.
- 박홍서 (2008).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1호, pp. 299-317.
- 이상환 (2015). “세계질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 세력전이 시각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8집. 1호, pp. 1-23.
- _____ (2017). “북한 핵무기 개발과 한국의 외교전략: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0집. 1호, pp. 121-141.
- _____ (2020a). “감염병의 국제관계: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JPI 정책포럼』. 2020-2, pp. 1-26.
- _____ (2020b). “포스트 코로나: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통권 24권, pp. 8-10.
- _____ (2020c). “세계화와 탈세계화: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 제135호, pp. 91-105.
- _____ (2020d). “Post COVID-19 시대의 국제정치: 탈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신냉전 질서의 도래.” 『정치·정보연구』. 제23집. 3호, pp. 151-168.
- _____ (2021a). 『국제정치경제: 시각과 쟁점』. 박영사.
- _____ (2021b). “미국-중국 간 통화 패권 경쟁과 국제정치경제질서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24집. 3호, pp. 25-49.
- _____ (2022). 『국제관계개론』. 박영사.
- Chan, Steve (2005). “Is There a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Different Faces of National Power.” *Asian Survey*. Vol. 45. No. 5, pp.

687-701.

Gates, Scott, Sang-Hwan Lee and Wonjae Hwang (2021). "The challenge facing middle powers: South Korea and India in the era of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24. No. 2, pp. 57-59.

Hwang, Wonjae, Randy Willemain and Sang-Hwan Lee (2020). "Trilateral Trade and Taking a Side Between the US and Chin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2. No. 4, pp. 601-623.

Lee, Sang-Hwan (2015). "Global and regional orders in the 21st century in terms of multi-layered power transition theory: The cases of US - China and China-Japan relation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8. No. 3, pp. 266-279.

Lenke, Douglas and William Reed (1996). "Regime Types and Status Quo Evalu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2. No. 2, pp. 143-164.

McKeown, Timothy J. (1983).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19th Century Tariff Levels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pp. 73-91.

Organski, A. F. 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llins, Brian M. (1989). "Conflict, Cooperation, and Commerce: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actions on Bilateral Trade Flo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3. No. 3, pp. 737-761.

2. 기타

CSIS. <http://www.csis.org>. (2022년 7월 15일 검색)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2022년 7월 22일 검색)

Global Fire Power. <https://www.globalfirepower.com>. (2022년 7월 15일 검색)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2022년 7월 15일 검색)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 (2022년 7월 8일 검색)

Ipsos. <http://www.ipsos.com>. (2022년 7월 29일 검색)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2022년 7월 29일 검색)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2022년 7월 8일 검색)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2022년 7월 8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2년 08월 19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08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09월 07일 |

| ABSTRACT |

**The US-China Hegemonic Struggles in the
Post-COVID19 Era:
Value Sharing? Profit Sharing?**

Sang-Hwan Lee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global society in the era of de-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reates new ideological conflicts, causes countries to coalesce with a new bloc logic, and eventually creates an international order for a new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ost-COVID19 era are characterized by 'solidarity within the bloc (networking)' and 'confrontation between blocs (competition/conflict)'. The international order will be reorganized into a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coalition that prioritizes values and the coalition that prioritizes interests. The group of value-sharing countries with the United States can be confirmed as the US, UK, France, Germany, Japan, Canada, Italy, Australia, and Korea (9 countries). Value-sharing countries with China can be limited to China, Russia and Turkey (3 countries).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based on shared values, it can be seen that the United States has an advantage over China. However,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bond is weakened compared to the Cold War. The US alliance is ahead of the Chinese alliance in terms of military hegemony, but the balance of terror between the two alliances is maintained in the nuclear confrontation structure. It can be seen that China has trade hegemony, financial and monetary hegemony is the

United States, and economic hegemony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is still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China has an advantage over the United States even in the context of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ased on “benefit-sharing”. Today’s international order is taking place in a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US network and the Chinese network. Considering the capabilities and solidarity of both alliances in terms of value sharing and profit sharing,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US alliance is ahead of the Chinese alliance, and that power transition from the US to China will be difficult in near future. In this situation, our strategic choice has no choice but to focus on the profit-sharing network based on the premise of value sharing, even if it does not exclude any one network.

- Key words: COVID19, Hegemony, Value Sharing, Profit Sharing, G20